

비상호출시스템 운영 10년...광주 시민들은 “잘 몰라요”

응급상황 신속대응 위해 CCTV관제센터 연계 비상벨 2759곳 설치 홍보 부족에 주민들도 비상벨 존재 몰라...신고 실적은 0.2% 불과

광주시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비상벨'을 늘리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여년 동안 운영되며 범죄를 막은 실적도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광주시 전역에 비상벨 설치가 100% 완료되는 만큼, 제도의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안에 비상호출시스템이 완비될 전망이다.

이 시스템은 기존에 CCTV가 있는 장소에 비상벨을 설치해, 영상과 음성으로 신고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응급상황에 처한 신고자가 비상벨을 누르면 CCTV가 신고자를 비춰, 센터에 있는 직원이 신고자를 실시간으로 보며 소통할 수 있다.

2013년에 출범한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운영하며,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상벨은 방범용·어린이보호용·주정차단속용 CCTV가 있는 곳에 설치된다.

현재 광주 시내 3717곳에 해당 CCTV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 중 2759곳에 비상벨 설치가 완료됐다.

광주시는 설치가 불가능한 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60곳에 설치를 마쳐 올해 안에 CCTV와 비상벨을 100% 연계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사각지대 없이 어디서나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도시 여건이 갖춰지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비상호출시스템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년 동안 거주한 주민들조차 비상벨의 존재를 알지 못했고, 무슨 상황에서 사용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비상벨에 대해 인근 아파트 주민 김소영(여·20)씨



광주시 북구 오치동의 한 초등학교 앞에 있는 비상벨(점선안).

는 “어릴 때부터 이곳에 살며 근처를 자주 돌아다녔지만, 오늘 처음 비상벨을 봤다”라며 “어떤 상황

서 비상벨을 사용하는지 잘 모른다”고 말했다.

또다른 주민 정갑중(73)씨는 “초등학교 앞을 지나다니며 비상벨을 봤지만, 무엇인지는 알지 못했다”며 “위급시 눌러주세요”라는 말이 적혀있긴 하지만 얼마나 위급할 때 눌러야 되는지, 누르면 누가 오는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앞에도 비상벨이 설치돼있지만, 주민들은 비상벨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주민 선모(여·42)씨는 “이 아파트에 10여년째 살며 비상벨을 몇번 봤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사실 오늘까지 횡단보도 음성 안내 버튼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비상벨의 크기가 작아 눈에 잘 띄지 않는데다, 단순히 “위기상황시 눌러주세요”라는 말만 적혀있어 현장에서 만난 시민들은 비상벨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비상호출시스템으로 범죄를 예방한 실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5만 5000여 건의 비상벨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70% 이상이 장난 신고였다.

25%는 센터 직원이 비상벨을 점검하기 위해 누

른 건수였다.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 비상벨을 눌러 센터 직원과 통화해 신고 실적으로 인정된 건수는 지난 8년 동안 127건으로, 0.2%에 불과했다.

신고 내용도 사람이 도로에 쓰러져 자고 있다거나, 술에 취한 사람이 누워있다는 정도였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비상벨을 통한 신고가 적은만큼, 비상벨 제도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무리 도시의 안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도, 시민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다.

김정규 호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초기 급한 위기 상황 때는 휴대전화로 신고 하는 것보다 비상벨을 누르는 것이 훨씬 빠르고 간편하다”며 “비상벨이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 어플을 개발하고, 비상벨 사용법 등을 시민들에게 적극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CCTV통합관제센터장은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을 확대해왔다”며 “어두운 밤에도 비상벨이 눈에 잘 띄도록 조명을 설치하고, 다양한 통로로 시민들에게 비상벨 사용법을 알리는 등 비상호출시스템을 알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광주시사회와 광주시간호조사회 회원들이 3일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시의사회관에서 간호법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천홍희 기자 strong@

광주·전남 민주노총, 건설노조 탄압 중단 촉구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가 지난 1일 강원도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해 숨진 것과 관련 “정부의 아만적인 탄압의 결과”라며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부는 3일 광주시 동구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에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 세계 노동자의 날, 건설노동자가 분신하는 비극이 발생했다”며 “현 정권은 고용안정과 생존권을 요구하는 건설노조를 부패하고 파렴치한 존재로 몰아세우며 노조에 대한 유례없는 탄압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인 단체

교섭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돌아온 것은 수사와 압수수색이었다”며 “전국적으로 13회에 걸친 사무실 압수수색, 40명에 이르는 조합원 압수수색, 조합원 950여 명 소환 조사, 15명 구속 등 전례를 찾기 어려운 전방위적 탄압으로 결국 건설노동자의 비극을 불러왔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도 이날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건설노조에 대한 부당한 탄압을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오는 10일까지 응답이 없을 경우 정권 퇴진 투쟁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천홍희 기자 strong@kwangju.co.kr

간호법 통과에 지역 의료계 찬반 갈등

광주시간호사회 등 환영...의사회 등 ‘연가 파업’ 반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이 통과된 데 따라 지역 의료계가 각기 다른 찬반의 입장을 내보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간호사회를 중심으로 한 일부 의료단체들은 환영의 의사를 밝히는데 반해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시간호조사회 등 의료단체는 반발하고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광주시간호사회 등 광주지역 88개 의료단체는 3일 성명을 내고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

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간호법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맡은 간호사들이 더욱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는 “간호법은 4차례에 걸친 국회 심의과정을 거치며 검증된 법률이다”며 “관련 직업의 업무를 침해하거나 위헌적 요소가 없다는 것도 충분히 검증됐다”고 주장했다.

광주시의사회와 광주시간호조사회 등 의료단체는 같은 날 광주시 북구 신안동 광주시의사회 회

관에서 집회를 열고 “간호법은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의료는 의사·간호사·간호조사·방사선사·응급구조사 등 여러 직업이 서로 돕고 보완하며 돌아가야 하는 유기적인 체계”라며 “간호법은 간호사 처우개선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보건의료 원팀 체제를 와해시키고 다른 보건의료 직업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빼앗는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 통과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광주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총파업 투쟁에 나설 것이며 모든 책임은 오직 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광주시의사회 등은 3일에 이어 오는 11일 연가 파업을 진행하고 17일 전국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텃밭·옥상서 양귀비 키우다...잇따라 적발

광주에서 마약원료가 되는 양귀비를 경작한 주민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광주경찰청장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75)씨와 B(여·58)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라고 3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재배용이 아닌 마약성분이 있는 양귀비를 각각 자신의 단독주택 텃밭에 75주, 150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바람에 날아와 화단에 심어진 것”이라며 경작한 것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두 동종

전과는 없다. 이에 앞서 남구에서도 주택 옥상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주민이 붙잡혔다.

월산동에 거주하는 C(여·80대)씨의 단독주택 옥상 화분에 심어진 양귀비 1주가 지난달 28일 순찰을 돌던 월산지구대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C씨도 양귀비 씨앗이 바람을 타고 옥상에 있는 화분에 떨어졌다고 진술해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중이다.

경찰은 이들이 경작한 양귀비를 모두 압수하는 한편 경작의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싼 **임야, 삽니다**
맹지사절. 010-9582-7400

대인동 **상업용지, 매매** 신안동

대인동 - 156평, 매매 - 21억

신안동 - 176평, 매매 - 23억

상업지역, 오피스텔 허가특, 변경가

문의. 010-3605-5000